‘희망 2009’ 이것만은 이뤄내자 ② J프로젝트·F1 특별법 등

지자체·지역 정치권 적극 나서야

연내 확정 안될 땐 장기 표류 가능성
자금문제 등 해결…정부·여당 압박을

여야가 지난 연말부터 새해 벽두까지 방송법 등 핵심법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J프로젝트, F1 특별법,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 R&D 특구 지정, 광역경제권 핵심 산업 선정 등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보여 왔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및 장기 표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현안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J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지난해 농림부의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 지연으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여기에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 침체는 민간 투자(1조9천억원 규모)의 위축을 가져오면서 J프로젝트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J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권의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F1 대회는 지난 7월 출자회사 7곳의 납입자본금 600억원을 확보했으며 경주장 건설을 위한 연약지반 다지기 작업도 지난 10월 끝나는 등 전체 공정의 35%가량이 이미 진행된 상태. 그러나 사업비 3천400억원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연되면서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F1 특별법도 국회 국제경기특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히,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F1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올 상반기 내에 F1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전남도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문제는 이달 내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중순께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12년 완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R&D 특구 지정은 지난해 정부의 지방종합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구체적인 시기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광주의 R&D 특구 지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정부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5+2 광역경제권 핵심 산업 선정도 지역 최대 현안이다. 아직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새로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5+2 광역경제권은 제도적으로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지방균형발전법 내용 수정도 절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주재 유엔사무소 앞에서 장난감 총을 든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없는 휴전을” 하마스 백기 드나

고위간부, 佛 뉴스채널과 전화 인터뷰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이 강화되면서 하마스 진영에서 ‘조건 없는 휴전’에 응할 뜻이 있다는 신호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자지구에 은신해 있는 하마스의 고위간부 아흐마드 유수프는 지난 4일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24’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수프의 발언이 하마스 전체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하마스 진영에서 조건을 달지 않는 휴전을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파상적인 공습을 이어갈 때에도 가자지구 봉쇄 정책을 해제하지 않으면 휴전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었다.

하지만 지상전 개시 이후 이스라엘 탱크부대에 의해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양단되고, 최대도시인 가자시티가 이스라엘 지상군에 포위되는 등 수세에 몰리자 하마스는 무조건적인 휴전을 제안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지난달 19일 이스라엘과의 6개월 휴전이 종료된 이후 이집트의 휴전 연장 중재를 거부했던 하마스가 돌연 카이로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하마스가 처한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읽을 수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 작전 때까지만 해도 가자지구 내 주요 시설물이 파괴됐어도 지휘체계와 통신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상전 사흘째인 5일 현재에는 가자지구 내 전화가 두절되고 간선도로들도 포격에 맞아 끊긴데다 무장조직들마저 곳곳에 고립돼 있어 이스라엘군에 대한 일사불란한 반격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연합뉴스

‘출범도 하기전에…’ 오바마號 삐걱

리처드슨 상무장관 내정자
‘특정 업체 유착’ 의혹 낙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각료 내정자 가운데 한 명이 낙마했다.

상무장관 내정자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특정업체와 자신과의 유착 의혹에 관한 대배심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장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무장관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슨 주지사의 이런 발표는 보름 정도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시카고를 떠나 워싱턴에 입성, 5일 의회지도자들과 경기부양법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기로 한 시점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리처드슨 주지사의 입각 철회 결정을 수용했다.

겉으로는 담담한 듯 하지만 오바마측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한결같이 외교안보팀 인선을 끝낸 후 경제팀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내용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최장기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킨 조치였다.

오바마의 각료, 특히 경제각료 가운데서도 상무장관직은 간단히 볼 위치가 아니다. 이런 자리에 7선의 하원의원 경력과 에너지 장관, 유엔 대사, 현직 주지사라는 화려한 이력을 지닌 거물급 인사를 내정했다가 인준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오바마 측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해야 할 오바마 행정부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정권인수팀의 사전검증 시스템에 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슨 주지사가 입각을 철회키로 결정한 배경은 그에게 정치헌금을 건넨 기업체가 뉴멕시코주의 발주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에 관해 연방 대배심의 조사가 착수된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배심은 리처드슨 주지사의 정치활동에 자금을 제공한 캘리포니아의 한 기업체가 뉴멕시코 주정부로부터 10억달러의 계약을 따낸 것에 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대배심의 조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각 철회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출직인 뉴멕시코 주지사직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측도 리처드슨 주지사의 이런 결정을 수용, 상무장관 내정자를 새로 물색키로 했다.

한편, 리처드슨 주지사는 새 행정부에 입각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오바마 정부에 봉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부의 고위직 진출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 “팔레스타인 주민에 30만弗 지원”

“무력사용 즉각 중단·휴전복귀 요청 호응 촉구”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3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를 위해 3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30만 달러는 한국 국제협력단의 긴급 지원자금에서 충당된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중동 평화 정착은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휴전복귀 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가자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무력충돌과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공격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한 성명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